

불길 마을 덮칠까 ‘벌벌’…주민들 뜬눈으로 밤 지새

르포-광양 산불 현장 가보니

“평생 이 동네서 살아왔는데, 저만한 큰 불이 날 줄은 상상도 못 했어. 놀란 기습이 가리앉질 않아서 밤새 잠을 설쳤제.”

22일 오전 찾아간 광양시 옥곡면 백운산 일대 점터마을은 입구부터 매캐한 탄 냄새로 가득했다.

코끝을 강하게 찌르는 냄새와 함께 마을 하늘은 산에서 내려오는 타버린 잣가루들이 겨울바람을 타고 떠다녔다.

전날부터 대피령이 떨어지면서 마을에는 오가는 주민 한 명 찾아볼 수 없었고 산불 진화 헬기에 방향을 잃은 매서운 겨울바람이 마을로 떠밀려 내려왔다.

밤새 화마가 끊고 지나간 산자락은 낙엽과 잡초 조차 보기 힘들 정도로 바싹 타버려 앙상한 나무만 남아 있었다. ‘안전’ 판정이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금세 산불이 다시 일어날 것만 같은 위압감을 줬다.

이곳에서는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산불이 발생했다. 광양시 옥곡면 북백리의 한 주택에서 시작된 화재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추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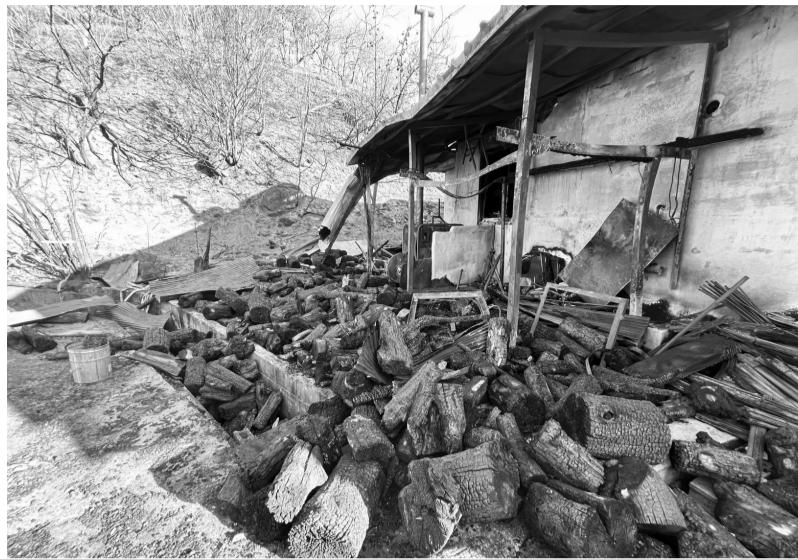
불은 19시간이 넘게 뒷산을 태우며 마을을 공포의 힘 속으로 몰아넣었다. 산불로 축구장 70개 규모인 49여ha 임야가 불탔으며, 옥곡·진상면 일대 5개 마을 주민 601명은 부랴부랴 마을회관 등으로 임시 대피했다.

전날 밤부터 옥곡면 임시 대피소인 옥구슬건강문화센터에 모여있던 주민들은 좀처럼 긴장을 풀지 못한 채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다.

화재 현장 옆집에 거주하는 양주원(72)·이미엽(여·68)씨 부부는 “탄 냄새가 나 밖으로 나가보니 불이 순식간에 산으로 번졌다. 차로 대피해 지켜보는데 창고 뒤편이 다 타들어가 벌벌 떨었다”며 “불이 온천지에서 도끼비를 저며 번쩍번쩍했다. 바람을 타고 불길이 집을 덮칠까 무서워 대피소에서 도한숨도 못 잤다”고 한숨을 쉬었다.

소방차와 대원들이 출동, 하루 종일 진화 작업에 착수했으나 불길을 잡지 못했고 화재 발생 1시간도 못돼 대응 1단계를 지나 2단계(오후 4시 31

주택 화재, 인근 야산으로 번져
화마 훑고 간 산자락 잣더미
웃도 못 챙긴 채 황급히 탈출
연기·탄 냄새 대피소까지 진동
49ha 태우고 19시간만에 진화



지난 21일 광양시 옥곡면 북백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의 화목보일러와 인근 장작들이 불에 그을린 모습.



22일 광양시 옥곡면에 마련된 화재 임시 대피소인 옥구슬건강문화센터에서 주민들이 점심으로 배분된 도시락을 먹고 있다.

분)로 상황됐다. 오후 5시 5분에는 소방청 국가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산불전문진화차와 인력, 헬기 등이 전국에서 추가 투입될 정도로 산불은 커졌다.

안정희(여·82)씨도 “평생 이곳에서 살아왔지만 산불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 급하게 나오느라 옷도 제대로 못 챙겨입었다”며 “밤새 연기와 탄 냄새가 대피소까지 진동해 잠을 설쳤다. 집에는 피해가 없다고 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산불 발생 3시간이 지난 전날 저녁 6시 30분께 진화율도 고작 56%에 머물렀을 정도로 강한 바람에 불씨는 산을 넓게 타고 돌아다녔다.

소방당국은 첫날에만 소방·경찰 등 1654명을 투입하고 1932의 장비를 동원한 데 이어 이튿날에도 2646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장비도 228대를 추가 투입하며 밤새 진화에 나서면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불길을 잡았다.

같은 시간 인근 진상면 임시 대피소인 백화문화복지센터에 모인 주민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대피한 주민들은 과거 대형 산불이 전국을 덮쳤던 사례들을 떠올리며 밤새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만 기도하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최강자(여·82)씨는 “대피 방송을 듣고 지난해 영남 대형 산불이 떠올라 너무 무서웠다”며 “불로 산이 벌겋게 물들어 불길이 동네를 삼킬까 걱정했는데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정자현(25)씨는 “일 때문에 순천에 와 있다가 광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조부모 댁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혹시 큰일이 날까 두려웠

는데, 두분 모두 안전하셔서 마음이 놓인다. 불이 끊긴 이후로도 현실감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주민들은 낮 12시를 기점으로 주민 대피 명령이 해제되는 후대전화 안전안내문자를 받았지만 불 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소방 헬기 재발화를 막기 위해 화재 영향구역 일대에 물을 계속해서 뿌려댔고 대원들도 산불 진화용 등집 펌프를 맨 채 산을 오르내리며 산불을 점검했다. 언제 재발화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부 주민들은 밭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안전’ 판단이 내려졌지만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 탓에 재발화할 가능성이 있어 완전 여부는 주말이 되야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불은 꺼졌지만 광양과 여수 일대는 여전히 견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백대성 광양소방 소방안전조사팀장은 “밤샘 진화로 안전사고 위험과 주위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바람이 불고 날씨도 매우 건조해 민가로 불길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며 “주말까지 재발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하고 안전하게 산불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글·사진=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사칭 ‘사기 주의보’

공사측 “일주일새 신고 4건”

22일 전기 장비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수상한 전화를 받았다. ‘자칭’ 전남개발공사 시설관리팀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와 투자 권유 내지는 공공 사업을 제안해 온 것이다. 전화 상대는 전남개발공사로 고유가 있는 명함까지 보내며 만날 약속까지 적극적으로 잡으려 했다.

A씨는 순간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마음이 떨렸지만, 어떤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공사에 전화해보니, 같은 이름의 직원만 있을 뿐 전화번호는 완전히 달랐다. A씨는 “하마터면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과 계약을 할 뻔 했다”고 기습을 쓸어내렸다.

나주시에서 전기공사업을 하는 B씨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B씨는 사업자 등록증과 여성기업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까지 떼서 공사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공사 측으로부터 “그런 계약은 금지시작”이라는 답을 받았다.

전남 지역에서 전남개발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개발공사가 전남도 신하 유일 공기업으로 전남도의 핵심 협약인 ‘전남형 만원주택’,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등을 주도하면서 침체 상황에 놓인 전남지역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노린 투자 사기라는 지적이나온다.

22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후 일

주일 사이, 공사 직원을 사칭한 투자 권유 전화를 받았다는 신고가 잇따라 4건 접수됐다.

사기범은 공통적으로 ‘공공기관 사업 계약’을 미끼로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업체들에 공공 발전 사업을 계약하자는 취지로 접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전남개발공사 직원 이름과 직함 등이 적힌 명함을 문자로 보내고, 실제 있지도 않은 장소에서 직접 만나자는 일정을 잡으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민간업체에 일방적으로 연락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신분 사정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공사 해당부서나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사는 현재 홈페이지에 사기 주의 공지를 게시한 상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5·18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인정

대법 “소멸시효 안 지났다”

5·18 민주화운동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성립되지 않아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앞서 운양원 열사를 비롯해 다수의 5·18 유가족들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과거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 하에 손배소에서 패소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단을 기점으로 유가족들이 대거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우 대법관)는 22일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파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990~1994년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이들이다.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회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조항은 2021년 현재로부터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으로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지 못했다고 보고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

손배소 재판에서는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성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현재의 위헌 결정이 있던 2021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인정했으나, 2심은 “유가족들의 손해는 옛 광주민주화보상법 보상 대상이 아니고, 회해간주 조항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장애가 없었다”고 봐 소멸시효가 이미 성립됐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재의 위헌 결정 전까지 이들에게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애가 있었던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 13명, 손배 항소심도 승소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파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난 2019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미쓰비시측은 손해배상청구권은 과거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소멸했고, 소멸시효가 이미 완료됐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2019년, 202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과 협력해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 피해자별로 1억원씩 위자료를 배상하고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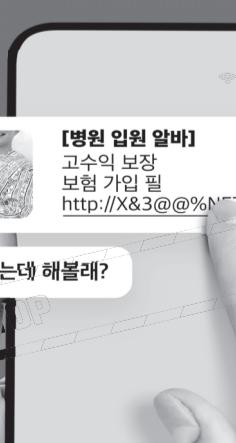
원고들은 유족들은 광주·강진·고흥·곡성·나주·구례·순천 등지에서 출생해 일제에 의해 미쓰비시 중공업의 철공소·항공기제작소·고체조선소·요코하마조선소 등지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의 배우자·자녀·조카 등이다. 피해자들은 1945년 급여 한푼 받지 못한 채 모두 귀국했으며, 이에 지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한 사람의 보험보조
전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 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증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h-well
국민건강보험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보험GA협회
Insurance GA Federation